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

중소기업 정책,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중소기업 숙원과제 반영 현황

기업승계 전향적 개편

- 납부유예 제도 신설, 가업상속공제와 선택적용 허용
- 가업상속공제대상 매출액 기준을 2배 이상 대폭 확대(0.4조원→1조원)
- 사후관리 기간 축소(7년→5년) 및 요건 완화
-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현 100억원)를 가업상속공제 수준(현 500억원)으로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 마련·추진, 표준계약서 마련 및 시범운영('22.하)

그림자규제 등 규제혁파

법령이 아님에도 실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 개선

주 52시간제 개선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운용 선택권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축

경사노위내 노사·전문가 논의체계 마련, 불법부당행위 엄정대응

서비스업 지원 차별 해소

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산업단지 업종 특례지구 지정요건 완화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촉진

스마트공장 확산 및 사업전환 인정범위 확대

민간의 벤처투자 유인 확대

복수의결권 도입 등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외국인 정책 개편 종합 검토

중소기업 채용 전문인력 발급기준 완화, 숙련인력쿼터 확대 등 고용허가제 전면 개편

순환경제·ESG 생태계 조성

민간중심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지원